

출장결과

I. 출장 개요

1. 출장목적

- 직접지불제가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,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를 ‘공익형’ 직불제와 ‘소득안정형’ 직불제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하여,
- 일본의 ‘쌀호별소득보상모델사업’(2010), ‘호별소득보상제도’(2011) 등 소득안정형 직불제 실시동향, ‘농지·물·환경보전 직불제’(2007) 등 공익형 직불제의 실시사례를 조사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함.

2. 출장자

- 김태곤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

3. 출장지역 및 기간

- 일본 도쿄(東京), 사이타마현(埼玉縣) 구마가야시(熊谷市)
- 2010년 7월 27(화)~30일(금) 3박 4일

4. 조사항목

- ☐ 쌀농업 관련 직불제 조사
 - 쌀호별소득보상모델사업 실시동향
 - 논자급력향상사업 실시동향 등
- ☐ 호별소득보상사업 조사
 - 호별소득보상사업 제도설계동향

- 호별소득보상사업과 다른 직불제와의 관계
- 소요 예산 등

☐ 공익형 직불제의 우수사례 조사

- 농지·물·환경보전 직불제 우수 실시사례
- 직불제의 지역농업 진흥효과 및 농업자원 보전효과 등

☐ 농정동향 및 관련 자료수집 등

5. 방문기관 및 면담자

☐ 農林水産政策研究所

吉井 邦久 農林水産政策研究所 国際領域 上席主任研究官
 会田 陽久 農林水産政策研究所 国際領域 上席主任研究官
 上林 篤幸 農林水産政策研究所 食料環境領域 上席主任研究官

☐ 農林水産省

上大田 光成 農林水産省 農村振興局 土地改良企画課 課長
 田中 竜太 農林水産省 農村振興局 農地資源課 農地水環境対策室 室長
 齋藤 伸 農林水産省 農村振興局 農地資源課 農地水環境対策室 保全活動支援事業班 課長補佐
 中司 昇吾 農林水産省 農村振興局 農地資源課 農地水環境対策室 保全活動支援事業班 保全技術係長

☐ 東京大学

谷口 信和 東京大学大学院 教授
 安藤 光義 東京大学大学院 準教授

☐ 日本農業研究所

李 侖美 日本農業研究所 研究員

☐ 現場視察(埼玉県 熊谷市 吾妻行政센터)

会田 陽久 農林水産政策研究所 国際領域 上席主任研究官

高坂 快児 農林水産省 農村振興局 農地資源課 農地水環境対策室 調整係長
 渡辺 大輔 農林水産省 農村振興局 農地資源課 農地水環境対策室 保全指導係
 長
 大西 正修 農林水産省 関東農政局 農地整備課 課長補佐
 沢田 英夫 埼玉県 熊谷市 産業振興部 農地整備課 課長
 内田 孝司 埼玉県 熊谷市 産業振興部 農地整備課 副課長
 吉田 秀樹 埼玉県 大里農林振興センター 整備支援・管理担当
 木村 展之 熊谷市 産業振興部 農地整備課

6. 조사일정

일 정	방문기관	업무내용
7.27(화)	출국(김포~하네다) 농림수산정책연구소	○ 쌀 직불제 실시동향 ○ 농정개혁 동향 ○ 관련 자료수집
7.28(수)	동경대학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	○ 일본 농정개혁에 관한 의견교환 ○ 일본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동향 ○ 외국의 직불제 개편동향 등
7.29(목)	(현지 사례조사) 농림수산성 관동농정국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	○ 농지·물·환경보전 직불제 실시사례 ○ 현장견학 등
7.30(금)	귀국(하네다~김포)	

Ⅱ. 출장 결과

1. 2010년 쌀정책 개혁

1.1. 개요

- 2010년 쌀 정책은 기본적인 틀은 생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해나가 되 직불제를 중심으로 지원규모나 지불방식에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.
- 주식용 쌀의 생산조정은 계속하고 단지 종전의 의무제에서 선택제로 전환하였다.
- 2010년 쌀정책은 ‘쌀 호별소득보상모델사업’과 ‘논 자급력향상사업’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.
- 쌀정책은 직불제를 통하여 쌀농업 소득보전, 논의 효율적인 이용, 식량자급률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.

1.2. 쌀 호별소득보상모델사업

(1) 목적

- 민주당 정부는 정권공약에서 1조엔 규모의 ‘호별소득보상제도’를 2011년부터 전면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다.
- 쌀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조기 실시하는 것이 쌀 호별소득보상모델사업이다. 논에서 식량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한 ‘논 자급력향상사업’과 ‘쌀 소득보상모델사업’ 등 2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한다.
- 모델사업은 자급률 향상과 쌀농업 경영안정이라는 2가지 목표를 세트

로 한 사업이다. 직접지불을 통하여 논농업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맥류(밀, 보리), 대두, 쌀가루용 쌀, 사료용 쌀 등의 생산을 지원하여 자급률을 향상하고, 동시에 만성적인 적자문제를 안고 있는 쌀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.

(2) 지원방식

- 지원방식은 고정지불과 변동지불 등 2단계로 지불한다.
 - 고정지불은 ‘표준적인 생산비’와 ‘표준적인 판매가격(목표가격)’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‘고정지불 단가’를 결정하고, 당해년도 판매가격에 상관없이 ‘대상 식부면적’을 기준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보전한다.
 - 변동지불은 당해년도 판매가격에 고정지불을 지급해도 목표가격(표준적인 생산비)을 하회하면 그 차액이 변동지불의 단가가 된다.
- 표준생산비
 - 표준생산비는 모델사업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. 즉 표준생산비와 표준판매가격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이것이 고정지불의 단가가 된다. 다른 하나는 표준생산비는 일종의 ‘목표가격’의 역할을 한다.
 - 표준생산비는 쌀 생산비통계에 근거하여 경영비 전액과 가족노동비의 80%로 계산한다. 이러한 면에서 모델사업은 ‘생산비보상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.
 - 실제 산정은 최근 7년(2002~08년) 중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5년 평균(13,703엔/60kg)을 사용한다.
- 표준판매가격
 - 일본은 수입농산물의 영향으로 구조적으로 가격이 생산비를 하회하는 품목이 몇 가지 있다. 쌀은 관세화 이후 상업적 수입실적은 없으나 MMA 수입쌀과 국내 공급과잉 등의 요인으로 최근 가격이 하락하여 쌀농업의 경영적자가 확대되고 있다.
 - 표준판매가격은 최근 3년간(2006~08년) 평균가격이다. 도매가격에서 유통경비를 제외한 ‘농가판매가격’(11,978엔/60kg)이 기준이다.
- 차액(고정지불)
 - 표준생산비와 표준판매가격의 차액은 가마니당 1,725엔/60kg

- 이것을 10a당으로 환산하면, 전국 평균단수 530kg/10a로 계산하면 15,238엔/10a
- 1,000엔 미만을 사사오입하면 15,000엔/10a이 차액이며, 이것이 고정지불의 단가이다.

○ 당해년도 판매가격

- 당해년도 판매가격은 당해년도산 쌀의 출하이후 익년 1월말까지의 전국 평균가격을 사용한다.
- ‘당해년도 판매가격+고정지불’이 목표가격을 하회하는 경우, 그 차액이 변동지불 단가로 되어 생산자에게 지불된다.

(3) 대상농가

- 쌀 ‘생산수량목표’에 따라 생산하는 판매농가 또는 마을영농이 대상이 된다. 쌀 생산수량목표는 농가별로 배분하며 쌀 생산조정의 역할을 하며, 일종의 생산상한이다.

- 판매농가란 쌀 공제가입자를 판매농가로 간주한다.

- 단지 미가입자는 전년도 출하량, 출하처와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.
- 마을영농은 규약,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판매경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.

- 모델사업과 공제제도와와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면, 공제제도는 재해가 발생한 ‘특정지역’의 농가가 대상이 되며, 모델사업은 자연재해에 의한 개별 농가의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수입하락에 대응한다. 양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.

(4) 대상면적

- 주식용 쌀 식부면적은 132만ha에 달한다. 모델사업의 대상면적은 주식용 쌀 식부면적(132만ha)에서 자가소비용 쌀과 연고미 상당분으로 일률적으로 가구당 평균 10a를 공제하여 계산한다. 단지 양조용 쌀과 종자용 쌀은 자가소비용으로 전환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는다.

- 따라서 10a 미만의 소규모 생산자는 모델사업에서 제외된다. 단지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수량목표를 제로로 배분하는 고의적인 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.

(5) 소요예산

- 소요예산은 1,980억엔(고정지불 단가(15,000엔/10a), 대상면적(132만ha))에 달한다. 이 금액은 모델사업 총예산(3,371억엔)의 60% 수준이다. 나머지 40%(1,391억엔)는 당해년도 판매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한 변동지불 금액이 된다.
- 1,391억엔을 가마니당(60kg)으로 환산하면 1,193엔에 상당한다. 이것은 2010년산 쌀판매가격이 표준판매가격(11,978엔)보다 1,193엔 이하의 10,785엔까지 하락한 경우를 상정한 예산확보이다.

1.3. 논 자급력향상사업

(1) 목적

- 의무적인 쌀 생산조정에서 자율적인 논 이용으로 정책을 전환, 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,
-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전략작물의 생산을 확대하여 ‘쌀 과잉해소’와 ‘자급력 향상’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.

(2) 추진방식

- 우선 국가가 전략작물을 지정한다. 전략작물이란,
 - ① 신규수요미(미분용 쌀·사료용 쌀·바이오연료용 쌀·청벼)
 - ② 맥류·대두·사료작물
 - ③ 메밀·유채·가공용 쌀 등이다. <표 1>
- 전략작물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작물을 생산하는 판매농가에게 주식용 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일률적인 단가로 생산

조정에 상관없이 직접지불을 실시한다.

- 단지 부실 생산이나 위장 생산을 방지하고, 수요에 따른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은 실수요자와의 출하계약 확인이나 수확작업 실시(작업일지로 확인)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.

(3) 단가

- 산지지원대책에서는 지역별로 추진협이 중심이 되어 지역별로 단가를 설정하여 지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나 자급력향상사업에서는 전국 일률적인 단가이다.
- 단가 수준에서 미분용, 사료용, 바이오연료용, 청벼용 쌀 등 신규수요용 쌀 수요증가를 전망하여 이러한 용도의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단가를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.
- 전국 단가를 설정함으로써 대두 등은 단가 하락으로 생산체제 유지가 곤란한 지역이 발생하는 문제도 예상되고, 지역에 따라서는 채소, 화훼, 잡곡 등을 전락작물로 생산한 지역에서는 제외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표 1 논 자급력향상사업 단가

작물	단가(엔/10a)	비고
① 맥류, 대두, 사료작물	35,000	
② 신규수요미 미분용, 사료용, 바이오연료용, 청벼용	80,000	
③ 메밀, 유채, 가공용 쌀	20,000	
④ 기타작물	10,000	현별로 설정

주 : ①, ②, ③이 전락작물이며, 채소·화훼·잡곡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자료 : 농림수산성

2. 사료용 쌀 생산확대대책

(1) 목적

- 생산력이 높은 논농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일본에서 수요가 많은 사료용 쌀의 생산확대를 통하여 식량자급률을 향상하는 동시에 쌀 과잉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.
 -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, 사료용·미분용 쌀은 논을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
 - 사료용 쌀의 잠재적인 수요는 1,200만톤. 일본 국내 축산물을 전량 국내 사료로 생산한다고 한다면 곡물자급률은 49%로 향상
- ‘논 자급력향상사업’(2010)으로 증산을 유도하며, 동시에 생산기술체계 구축, 수요개발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.
 - 사료용 쌀, 미분용쌀 생산 농가에 주식용 쌀과 동등한 수준의 소득이 확보 되도록 직접지불을 실시(8만엔/10a)
 - 요건은,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와 판매계약 체결을 의무화

(2) 생산목표

- ‘식량·농업·농촌기본계획’(2010. 3)에서 2020년 자급률 목표를 열량기준으로 50%로 상향 조정하였다.
 - 자민당 정부는 2015년 45%
- 2020년 생산목표
 - 사료용 쌀 : 2009년 23,000톤, 2020년 70만톤(800kg/10a, 식부면적 8.8만ha)
 - ※ 미분용 쌀 : 2009년 13,000톤, 2020년 50만톤(650kg/10a, 동 7.7만ha)
- 쌀 생산의 방향을 ‘생산억제’에서 ‘생산확대’로 전환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할 수 있다. 구체적으로는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‘호별소득보상제도’를 도입, 수입 농산물을 대체하는 품목의 증산을 유도한다.

(3) 사료용 쌀 생산기술체계

- ① 저코스트 효율적인 생산체계 구축과 보급

- 단수 향상을 위한 재배 매뉴얼 개발
 - 다수확재배 매뉴얼
 - 사료용 쌀의 생산·급여기술 매뉴얼

- 청벼 수확·조제기술
 - 자주식세단형(自走式細斷型) 수확기
 - 사료용벼 전용기
 - 범용형 사료수확기

- 가축 영양흡수를 향상
 - 벼·현미 양용 파쇄기

② 다수확 품종개발과 보급

- 신규 수요미에 적합한 다수확 품종으로 용도별(미분용, 사료용, 청벼용), 기 후구분(한지, 한랭지, 온난지, 난지 등)별로 품종 육성

- 현재 현미 수량 700~800kg/10a, 청벼 1.5톤/10a의 다수확 품종을 개발

- ‘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’가 희망농가에게 종자를 공급

③ 기타

- 사료용 쌀의 생산자인 도작농가와 이용자인 축산농가의 연계
- 사료용 쌀의 합리적인 물류체계 구축
- 퇴비투입 등 지력 증진
- 규모확대 및 농지조건 개선 등 강구 중

3. 농업·농촌의 다원적기능형 직불제 도입 : JA전중의 정책제언

3.1. 기본원칙

-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생산을 계속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발휘된다. 이러한 기능을 평가하여 국민 전체가 농업·농촌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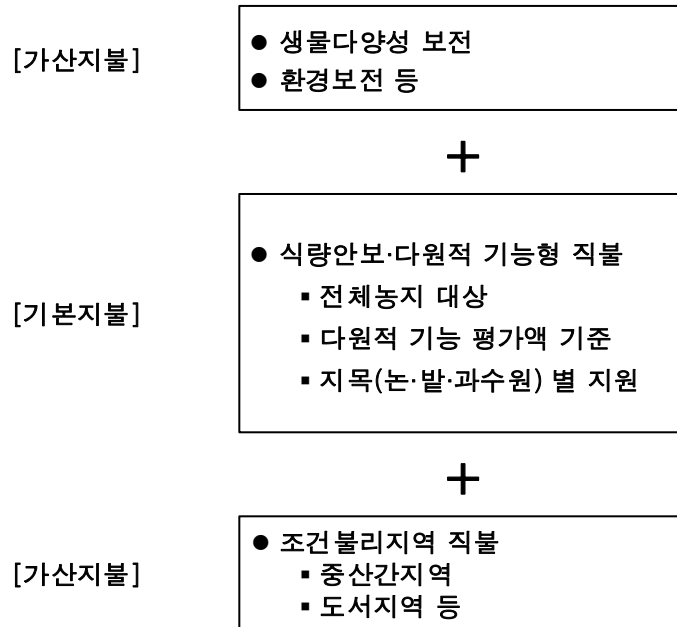
- 즉 농업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토 보전, 홍수 방지, 생물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. 일본학술회의에 의하면 이러한 기능은 8.2조엔에 달한다.
- 그러나 지나친 글로벌화에 의해 농산물가격은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농업소득은 감소하여 전업농의 경영에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. 농업생산의 계속과 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의 발휘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.
- 따라서 식량안전보장을 포함한 다원적 기능을 평가하여 국민 전체가 지원하여 농업·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 농업의 특성을 살려서 일본에 적합한 새로운 직접지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.

3.2. 다원적기능형 직불제

-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어 왔다. 이 기능을 유지·보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필요하다. 논, 밭, 과수원 등 지목에 따른 지불을 실시, 10년후 목표인 461만ha의 농지를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.
- 새로운 직불의 산정은 농업의 식량안보기능이나 다원적기능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,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영농활동 등에 의한 소득의 안정적인 확보가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.
- 일본 농업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,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양적 및 질적인 확보가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. 이를 위해 농지를 농지로서 활용하는 모든 농가에게 지목에 따라 직접지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.
- 이 기본적인 직불에 추가하여 생물다양성 보전, 환경 보전 등에 기여하는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 각종 가산조치를 강구한다.
- 이러한 직불의 산정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영

농활동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.

그림 1 다원적기능형 직불제 개념도



자료 : JA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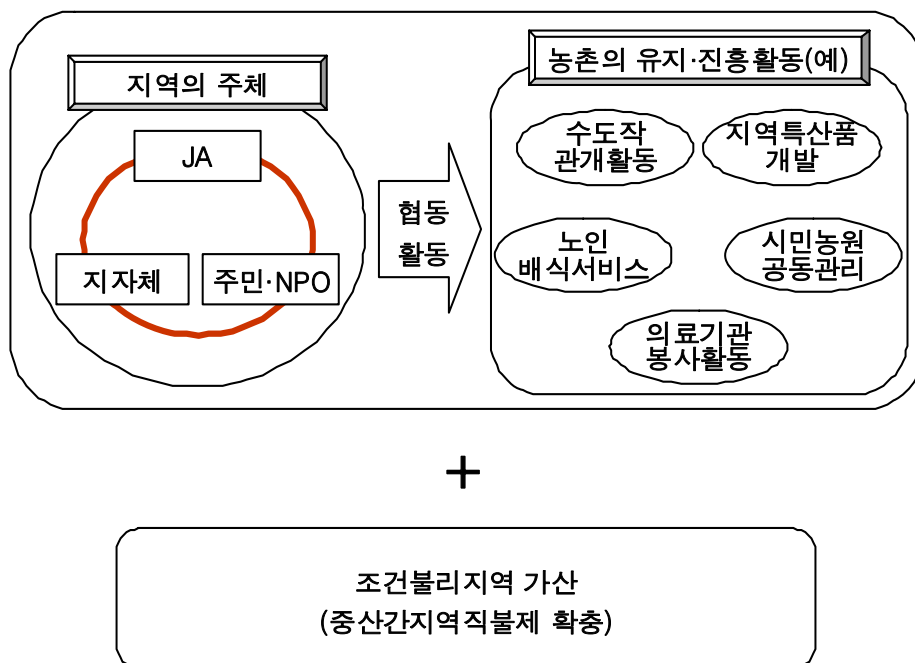
3.3. 농촌 진흥과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직불제

- 현행 농지·물·환경보전대책을 대폭 개선하여 농업용수 등의 자원보전을 위한 활동에 추가하여,
 - 의료활동
 - 고령자복지활동
 - 생활문화활동
 - 임대농원이나 직판장 등 농업을 통한 소비자와의 교류활동 등, 풍요로운 농촌사회 실현이나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농업인이나 지역주민에 의한 다양한 협동활동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.
- 중산간지역이나 도서 등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중산간지역직불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.
 - 지나친 시장개방이나 규제완화에 의해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 피

폐하고 있고, 의료·개호나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.

- 때문에 JA, 지역주민, NPO, 지자체 등 지역에 뿌리를 둔 주체에 의한 협동 활동을 통하여 행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상호 보완하여 서로 지원하는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.
- 이러한 농촌의 유지·진흥활동을 촉진하여 활력있는 농촌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, 지역주민, 협동조합, NPO 등 농촌의 지역공동체기능을 재생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동 활동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.
- 중산간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조건불리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현행 중산간직불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.

그림 2 농촌 진흥과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직불제 개념도



자료 : JA전중

4. 농지·물·환경보전 직불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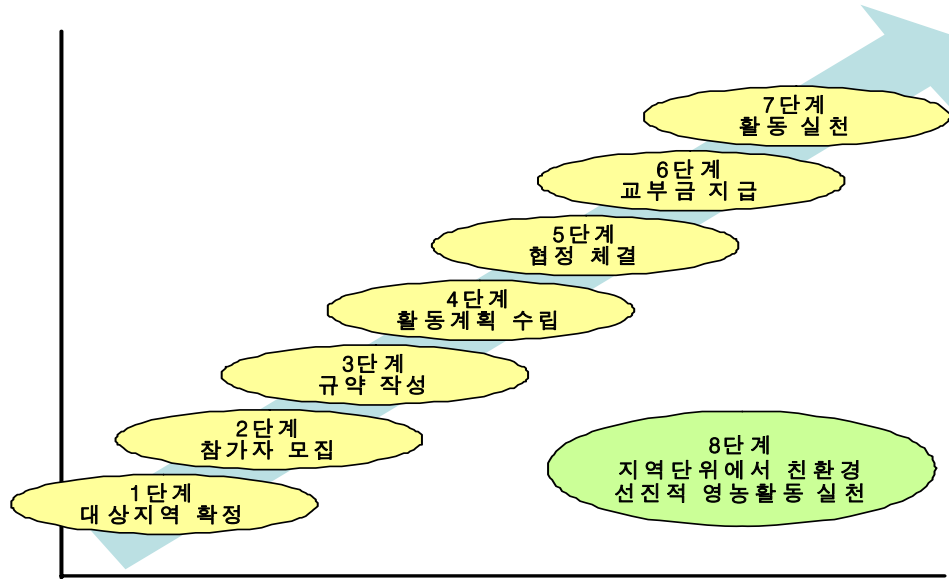
4.1. 목적

- 농지나 농업용수 등의 자원은 지금까지 마을 등 지역단위에서 공동활동에 의해 보전되어 왔다. 이러한 자원은 농업만이 아니라 농촌의 풍요로운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형성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.
- 고령화·혼주화 등에 의해 농지나 농업용배수 등 자원은 종전과 같이 적절히 관리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.
- 한편 국민은 농촌환경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 농지·농업용수 등 자원의 보전과 함께 농촌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.
- 따라서 농지·농업용수 등 자원이나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질 높은 지역단위의 ‘공동활동’과 환경보전을 위한 선진적인 ‘영농활동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.

4.2. 실시과정

- 실시과정은 <그림 3>과 같다.
 - ① 대상지역 확정
 - ② 참가자 모집
 - ③ 규약 작성
 - ④ 활동계획 수립
 - ⑤ 협정 체결
 - ⑥ 교부금 지급
 - ⑦ 활동 실천
- 이상이 과정이 행해지면,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인 ⑧ 지역단위의 친환경 선진적 영농활동이 추가로 실천한다.

그림 3 농지·물·환경보전 직불제 실시과정



자료 : 농림수산성

4.3. 대상지역

- 마을단위 : 마을단위로 공동활동을 행하는 체제
- 마을영농단위 : 마을영농조직으로 공동활동을 행하는 체제
- 수계단위 : 저수지나 제방 등 수계를 단위로 공동활동을 행하는 체제
- 사업단위 : 경지정리사업 등 사업실시단위로 공동활동을 행하는 체제

4.4. 활동조직

- <그림 4>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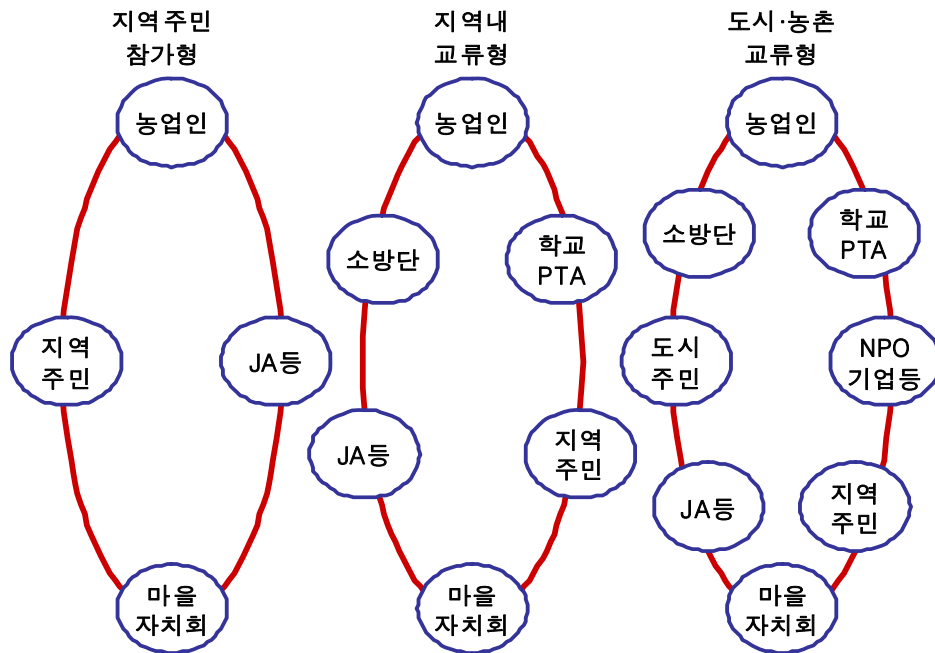
4.5. 활동계획

- 활동계획에는 대상자원, 실시계획, 지출계획 등을 포함한다.

4.6. 협정체결

-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조직은 시정촌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.
- 협정을 체결할 때에 활동조직은 결정한 활동계획을, 시정촌은 활동조직에 대한 지도나 실천사항 확인 등을 행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.
- 협정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상으로 한다. 단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협정기간에 상관없이 2011년까지이다.

그림 4 활동조직 구성원의 참가예



5. 사이타마현(埼玉縣) 구마가야시(熊谷市) 실천사례

5.1. 하타지구(秦 地區) 자원보전 활동사례

(1) 대상지역

- 구마가야시 俵瀬, 葛和田, 日向, 大野, 弁財

(2) 활동조직의 구성원

- 참가자는 농업인 578명, 비농업인 1,226명
- 구성원은 지역농업인, 마을자치회, 하타 토지개량구 등

(3) 주요활동

- 사이타마현 북부지역에서 위치, 주요작물은 채소, 미맥 재배지역으로 겸업농업지역이다.
- 특생있는 활동은 일본 양의학의 여의사 1호인 萩野씨의 탄생지로 유명한 곳이며, 공원 인접 배수로 경사면에 마을 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환경

미화로서 경관식물(팬지, 꽃잔디, 목란)을 식재활동이 대표적이다.

- 이 외에도 농로 풀베기, 배수로 청소 등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.

5.2. 오오타중부지구(太田中部地區) 자원보전 활동사례

(1) 대상지역

- 구마가야시 一の平, 飯塚, 道ヶ谷戸

(2) 활동조직의 구성원

- 농업인 155명, 비농업인 93명
- 구성원은 지역농업인, 3개 마을자치회 등

(3) 주요활동

- 3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, 경지정리사업이 30년 경과하면서 중형기계를 사용하여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다.
- 농로 사면에 방제용 시트를 설치, 사료용 작물을 식재하는 것이 주요활동이다.
- 향후 중기계를 사용하여 배수로 정비를 계속하고, 농로 사면에 장제용 작물식재를 확대할 계획이다.

6. 수집자료

吉井邦久, “アメリカにおける2012年農業法をめぐる動きについて：経営安定対策を中心に”, 第2108回 農林水産研究所 定例研究会資料, 2010. 7. 20

谷口信和, “米政策から水田農業政策へ”, 「民主党農政：政策の混迷は解消されるのか」, 農林統計協会, 2010. 6

谷口信和, “予算面からみた戸別所得補償モデル対策の性格をめぐって”, 「農村と都市をむすぶ」, 2010. 4

谷口信和, “新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をどうみるか特集にあたって”, 「農村と都市をむすぶ」, 2010. 6

- 谷口信和, “自給率向上への思想転換から政策転換へ”, 「農村と都市をむすぶ」, 2010. 6
- 谷口信和, “食料自給率50~60%を担保する農地利用・生産計画とは何か”, 「農業と経済」臨時増刊号, 2010. 1
- 谷口信和, “漁協自営経営を通じた担い手確保の構想: 田老町漁協の挑戦”, 「農村と都市をむすぶ」, 2010. 1
- 谷口信和, “農地法改正・民主党農政下の日本農業の担い手”, 「ジュリスト」, 2009. 11
- 谷口信和, “日本農業の基本問題とは何か”(未発表論文)
- 谷口信和, “21世紀日本農業の担い手をどうするか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” 「農業協同組合新聞」, 2010. 1. 10~7. 20
- 農林水産省, “戸別所得補償制度に関するモデル対策”
- 農林水産省, “食料自給率の向上を支える技術”, 2010. 2
- 農林水産省, “農地・水・環境の保全向上のために”, 2010. 3
- 農林水産省, “戸別所得補償制度について”, 2010. 6
- 農林水産省, “戸別所得補償モデル対策の概要”, 2010. 4
- 農林水産省, “戸別所得補償モデル対策関係資料集”, 2010. 7
- 梶井功編, 「農村と都市をむすぶ」2010年6月号別冊, 2010. 6
- 小林信一, 「日本酪農への提言」, 筑波書房, 2009. 8
- 埼玉県, “大里の農業農村整備”
- 埼玉県 大里農林振興センター, “農地・水・環境向上対策熊谷市活動事例集”
-
- 山下一仁, 「企業の知恵で農業革新に挑む」, ダイヤモンド社, 2010. 2
- “進化する農村ツーリズム”, 「農業と経済」臨時創刊号, 2010. 8
- “コンビ二農業”, 「週刊ダイヤモンド」, 2010. 6. 26
- 二村宏志, 「地域ブランド戦略ハンドブック」, きょうせい, 2009. 8
- 藤井正他編, 「地域政策入門」, ミネルヴァ書房, 2008. 10
- 関満博・松永桂子, 「農産物直売所」, 新評論, 2010. 2
- 加藤正明, 「成功する地域ブランド戦略」, PHP, 2010. 2
- 山浦晴男, 「地域再生マニュアル」, 朝日新聞出版, 2010. 6
- 中根雅夫, 「地域を活性化するマネジメント」, 同友館, 2010. 4
- 関満博, 「農と食の農商工連携」, 新評論, 2009. 11

(이상)